

美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 韓 자주국방 역량강화 기대

李 대통령, 韓美 정상회담서
“SSN 연료 공급 결단해달라”
요청 하루 만에 건조 허가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도 진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원자력추진잠수함·SSN) 건조를 승인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지난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원자력 연료 공급 결단을 요청한 지 하루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한국이 보유한 오래된 디젤 추진 잠수함 대신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도록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이다. 기대하라”고 말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지난해 6월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내 조선소다. 이번 발표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기존 디젤 추진 잠수함의 잠항 능력 한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계를 지적하며 “핵추진잠수함(SSN)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한국 정부가 핵연료 문제를 공개석상에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디젤 잠수함으로는 날로 복잡해지는 동북아 해상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깜짝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미가 협의 중인 SSN은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핵잠수함(SSBN)이 아니라, 재래식 무기를 운용하며 저능축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모델이다. 이 대통령도 모두발언에서 “한국은 핵무기를 적재할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저능축우라늄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

다. 현행 협정에는 ‘군사적 목적의 핵연료 사용 제한’이 명시돼 있다. 한국이 필요로 하는 것은 20% 미만의 저능축우라늄이지만, 이를 사용하려면 미국의 승인이 있어야 해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승인한 부분도 이 조항과 관련된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정상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요청에 공감하며 후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원자력협정은 기존 협의를 통해 일정한 방향성에 대한 양해가 이뤄져 있다”며 “관련 논의가 이미 상당히 진전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가 SSN 잠수함 도입 의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SN 건조는 우리 정부의 국방분야 숙원 사업이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SSN 건조를 추진했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우라늄 농축시설 사찰과 SSN 건조 계획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문재인 정부 때도 저능축우라늄 공급을 요청했으나, 미국 이 비확산 문제를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협정이 개정되면 한국의 자주국방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 인해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즉 동맹 현대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주한미군 감축 구상과 중국 견제 전략 속에서 한국이 더 큰 안보 역할을 맡을 가능성도 커졌다.

다만 재래식 무기 탑재형이라 하더라도 SSN 도입 자체는 중국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14일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포함한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 대상에 올리며 한미 조선 협력에 강력한 견제구를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정세를 감안해 중국 견제를 돌파할 수단으로 한화오션을 지목하고 SSN 건조를 승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경북 경주 APEC 국제미디어센터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향후 추진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번 결정이 국방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방어에서 우리 군의 주도적 역할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韓中 상호호혜적 협력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 바라”

李 대통령, ‘신화통신’ 서면 인터뷰
시진핑 주석, 11년 만의 국빈 방문
“APEC 가교로 지역협력 강화 의미”

이재명 대통령이 11년 만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문을 앞두고 “시 주석과 함께 한중 간 상호호혜적 협력을 추진하고,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0일 공개된 중국 관영통신사인 ‘신화통신’과의 단독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날부터 내달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빈 자격으로 한국에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의 제32차 APEC 정상회의 참석은 APEC을 가교로 미래지향적인 지역 협력 강화에 중요한 의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중 정상회담을 시청하고 있다. /뉴스시

미가 있다”면서 “시 주석이 이번 회의에 참석하고 11년 만에 한국을 국빈 방문하고 한국 새 정부 지도자와 첫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양자 차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 주석과 함께 한중 국교 수립 이후 내외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공통점으로 ‘지방정부’에서 정치커리어를 시작한 점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나와 시 주석 모두 지방정부에서 시작해 국민과의 소통 속에 민생 중심의 철학을 실천해온 공통의 경험이 있다”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중 관계의 상호 협력적 발전을 추진하고, 양국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실용적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중은 글로벌 주요 경제체로서 지역 발전과 번영을 이끄는 동반자이며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공급망 안정화의 핵심 파트너”라며 “1992년 수교 이후 양국은 상호 보완적인 산업 구조와 공급망을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무역·투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같이 활발한 경제교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물론 전 세계 산업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양국은 민생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경제·무역 협의 채널 확대 및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을 가속화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

히 한중 간 생산·공급망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시 주석과 이 사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짚었다.

한반도 정세 안정과 관련해선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026년 APEC 의장국을 맡는 중국을 향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국은 APEC을 개방적이고 활력 있고 평화가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공동체로 발전시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6년 APEC 주최국인 중국과의 협력을 기대하며, 한국이 제안한 의제를 중국이 이어받아 발전시키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APEC에서 한국이 제안한 의제는 ‘지속 가능한 내일 : 연결, 혁신, 번영’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과 인구구조 변화를 핵심 의제로 선정했다. /서예진 기자

국정감사 사실상 마무리… 법사위·과방위서 與野 공방 여전

與, 법사위서 대법원에 자료 요구
野 “권력 분립 파괴… 사법부 압박”
과방위선 최민희 위원장 논란 지속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부분의 상임위가 종합국감을 실시하며 사실상 일정을 마무리했다.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한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는 공방이 이어졌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최민희 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쓴 소리가 오갔다.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법무부 등을 상대로 종합국감을 진행했다. 김용민 여당 간사는 자료 제출 요청을 하며 “10월

15일 대법원 현장 국감을 진행하면서 자료 요구를 의결했다.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들이 (이재명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때 전원합의체에서 기록을 봤는지 로그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달라고 했지만 법원이 제출하지 않았다”며 “국회 증감법은 누구든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을 근거로 들 때 국회의 권한도 포함된다. 법률을 이유로 거부할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F학점으로 평가했다. 핵심 이유는 ‘권력 분립

파괴’”라며 “김용민 간사가 법원에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권력 분립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부당하게 사법부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법사위 국감을 파행으로 이끈 가장 큰 책임은 나경원 의원에게 있다”며 “본인이 법사위 국감을 파행으로 만들고 위원장에게 말도 안 되는 판지를 걸었다. 위원장의 발언 대부분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회의 진행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NGO 모니터단 이야기가 나왔는데, 법사위 파행의 여러 원인 중 하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

사진행 방해 행위였다”며 “위원장 발언을 종합해보면 ‘조용히 하세요’, ‘퇴거하세요’ 등이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과방위 종합국감에서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자녀 결혼식 축의금 논란이 여전히 이어졌다. 최형두 과방위 야당 간사는 “어제 우리 상임위원들이 위원장의 자녀 결혼식 문제, MBC 방문 당시 발언, 방심위 비판 보도 조치 문제 등을 이유로 위원장의 거취를 요구하며 퇴장했다”며 “당사자로서는 매우 억울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간사는 “국회의 신뢰도가 매우 낮고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며 “이런 문제는 오늘 국정감사가 끝나면 위원장께서 직접 소명할 예정이니, 상세히 설명하길 바란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받아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김장겸 의원실은 파감기관을 대상으로 기타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최 간사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요구한 MBC 방문 당시 비공개 속기록을 공개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며 “무엇보다 이 문제에 대해 여당이 분명한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 이 문제로 인해 국회와 우리 상임위가 국민의 거센 질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이 자녀 혼사를 명목으로 성명불상의 대기업 관계자 등 총 8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총 8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